

# 민·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

- 11월 10일, ‘대형화재’를 주제로 민·관합동 교육·컨설팅 실시
- 화학사고(11.17.), 선박사고(12.5.) 등 주요 사회재난 유형에 대해 순차 실시 예정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1월 10일(금)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‘대형화재’를 주제로 정부·지자체·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.

○ 이번 교육·컨설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11월 10일 ‘대형화재’를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‘유해화학물질 유출’, 12월 5일에는 ‘해양 선박 사고’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.

○ 10일 행사에는 중앙부처, 지자체, 연구기관, 민간 사업자 등\*이 참여하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전략을 논의한다.

\* (정부부처) 행안부, 소방청, 복지부

(지자체) 서울 중구, 인천 동구, 광주 광산구, 세종, 경기 안산, 전남 여수

(연구기관)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시·도 연구원, 외부 전문가

(민간분야) 노인요양병원 사업자, 전통시장 상인회,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

□ 교육·컨설팅 과정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.

○ 1부는 공통 교육으로,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「재난 관리체계 및 대응사례」와 「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」에 대해 강의한다.

○ 2부는 그룹 토론 방식의 집합 컨설팅으로, 참여자들은 소그룹을 구성하여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지역별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.

-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대형화재 관련 전문가가 소그룹별 2명씩 배정되어 퍼실리테이터(facilitator)로서 원활한 토론을 지원한다.
- 이를 통해, 참여자들은 지역별 주요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재 재난관리 수준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최종 대응방안을 모색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·컨설팅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, 이를 재난안전특교세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“사회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,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”라며,

○ “정부는 이번 교육·컨설팅을 계기로 지역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높여, 민·관이 함께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제룡 (044-205-61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선 (044-205-6128)

